
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

2020. 3.



목 차



I.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

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2

1. [평등]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2

2. [안전] 여성·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6

3. [돌봄]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10

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◆ 성·세대 평등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은 높아지고 있으나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

□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차별적 구조의 실질적 개선 필요

-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, 의사결정 직위로의 여성 진출을 위한 경력관리 시스템 요구
-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종합적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마련

□ 창의적·능동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

- 만 18세 청소년부터 선거 참여 등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대두
-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토록 청소년 관련 법령을 개정(19.6월 시행)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기반 조성

□ 가족형태의 다양성 인정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

-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요구
- 가족구성과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 필요

2. 업무추진 방향

◆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, 안전하며 상호 돌보는 포용 사회 구현

- **(평등)** 성평등 관점의 실질적 제도화 및 성·세대 평등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,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공정사회 구현
- **(안전)** 신종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, 결혼이주여성 및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
- **(돌봄)**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소통하는 열린 돌봄공동체 구축하고, 한부모·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

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]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

- ◆ 성평등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, 성·세대 평등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대
- ◆ 다양한 가족·청소년 포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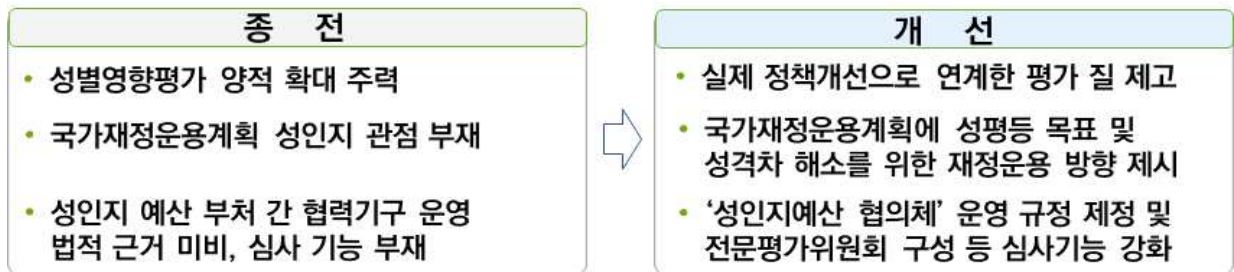
- (추진배경) 포용사회의 핵심가치로서 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직장 등 일상 속 성차별 문제 개선 필요
 - * (직장)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 66.6%(‘18년),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4.0%(‘19.1분기)
 - * (가정) 육아·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사유 : 여성 65.9%, 남성 2.9%(‘18년, 통계청)
- (주요내용)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를 개선하고,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들의 평등한 삶을 위한 지원 확대
 - 정책 전반의 성평등 관점 반영과 일상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
 -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인식 확산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, 청소년 참여 확대 및 활동 기반 개선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(1)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·제도의 실질적 개선

- (총괄·조정) 분야별 정책과 조직문화에서의 성평등성 제고
 - 교육·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* 이행 및 성과관리 강화
 - * 학교 성평등 교육 강화, 문화·예술·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등
 -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 및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과 교육으로 분야별 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
 - * 고용·교육·보건·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8개 부처 성평등 정책 지원팀 구성·운영

- (제도 내실화) 정부 주요 정책 및 예산의 성평등 관점 반영 강화
 -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와 성인지예산 제도 개선으로 주요 재정사업 성평등 목표 실현



-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 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확대
- (역량 강화)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활성화
 - 모든 공무원 신규·승진자 및 고위급 대상 기본 교육훈련과정*의 정규 교과목 편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설계
 - * 국가공무원(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, 부처 자체 교육원), 지방공무원(지방자치인재개발원)
 - 과장·고위공무원단 대상 성인지 역량 진단을 위한 모의과제 개발 및 시범운영 추진

(2) 가족·학교·지역에서의 성평등 실천

- (가족)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재정립
 - 부모·자녀세대 가족관계 재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
 - 남녀가 함께하는 가사 및 양육 프로그램 확대
- (학교) 성평등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
 - 초·중·고 학령별 및 대학생, 양육자 등 생애주기 대상별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 확대
 - 어린이·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성평등 도서 확산
- (지역)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구축*
 - * 지역양성평등센터 : ('19년) 4개소(시범운영) → 16개소 확대, 법적근거 마련 추진
 -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정책 모니터링으로 성불평등 요소 발굴 및 개선

(3) 경력단절예방 및 취·창업 지원으로 성평등한 일자리 확충

- (경력단절 예방)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력단절 예방 지원 확대
 - 재직여성 노무 상담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* 및 구직 준비단계 여성 대상 선제적 경력단절 예방지원 추진
 - * 서비스 지원기관 : ('17년) 15개소(시범운영) → ('20년) 60개소
 - 지역사회·산업분야와 연계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
- (직업훈련) 경력단절여성 특화 직업훈련 및 취·창업 지원 확대
 - 30·40대 경력자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맞춤형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확대('19년 10개소 → '20년 20개소)
 - AI·VR 기반 모의 면접 서비스 제공, 온라인을 활용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 등 역량 강화
 - 관계부처 자원 공동 활용*을 통한 여성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
 - * 창업 자금·공간, 전문 상담 프로그램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 등
- (공감대 확산) 여성 경제 활동 확대 기반 강화 및 공감대 확산
 -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 조사·공표
 -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지원 확대
 - 기업 내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및 컨설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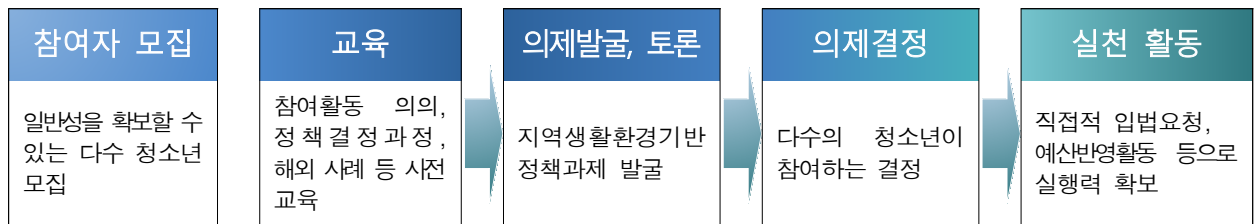
(4)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

- (제도 개선)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등 개정* 추진
 - * 「건강가정기본법」을 「가족정책기본법」으로 개정,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수용, 평등한 가족관계 등 명시
- (인식 확산)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캠페인 추진
 -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교육체계 구축
 - 다양한 가족 공감·소통 행사 개최, 방송·온라인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·송출 등 「세상모든가족함께」 캠페인 확대 추진

(5) 청소년 참여 확대 및 활동 기반 개선

- (참여 활성화) 지역사회부터 국제무대까지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
 - (지역) '청소년 다수'가 참여하여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, 토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체험의 장 마련

< 중점 추진 프로세스 >



- (중앙)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확대 및 靑少年政策위원회 등에 청소년을 위촉하여 직접적 정책 참여 기회 보장
 - * 청소년원탁회의 개최, 온라인 참여포털 상시화,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내실화 등
- (국제)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와 포럼 등에 청소년을 파견하여 국제 무대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 확대
- (환경 개선)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개편
 - (활동 시설) 4차 산업혁명,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게 청소년 시설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

- ▶ 국립청소년수련원(평창)에 디지털 체험관 신설 및 VR 체험존 구성(5개 국립청소년수련원, '20년 신규)
 - ▶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으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시설환경 구축('20년 신규)
 - ▶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(90개소)
 - (프로그램) AI와 가상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프로그램 제공 및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
 - (법·제도) 시대상을 고려한 청소년활동 개념·범위 재정의, 시설 유형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전부 개정 추진

②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

- ◆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지원 확대
- ◆ 결혼이주여성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

□ 개요

- (추진배경) 여성과 청소년 안전의 국가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
 - * '17.8월 ~ '19.5월 청와대 국민청원 젠더이슈 중 '여성폭력 안전'이 63%(141건) 차지 (한국여성정책연구원, '19.7월)
- (주요내용)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적·체계적 지원 강화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(1) 신종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

- (정책 기반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시행으로 데이트폭력·스토킹 등을 포함하여 법적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
 - (중앙)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등 여성폭력 총괄 기능 강화 및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운영, 통계·실태조사 등 통합 추진
 - (지역) 신설되는 광역단위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,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수립·시행
- (예방교육) 폭력예방교육 강사 질 관리 강화 및 맞춤형 콘텐츠 보급
 - 폭력예방교육 강사 질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
 -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* 개발
 - * 공공기관 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상시학습 서비스 지원(직원용 4종, 고위직용 1종)
 - 일반국민 누구나 여성폭력 감수성을 확인·제고할 수 있도록 '폭력 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' 개발·보급
 -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 개발 지원

(2)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

- (영상물 삭제)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'삭제지원시스템' 본격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**로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 추진
 - * 피해영상물 DNA 추출로 해외사이트 등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
 - ** 경찰청 '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'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'공공DNA DB'와 연계·협력
-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AI 활용기술 등 개발·적용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)
- (피해자 지원)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*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에 맞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
 - * (종전) 피해자 본인 → (개선) 본인 + 직계친족 등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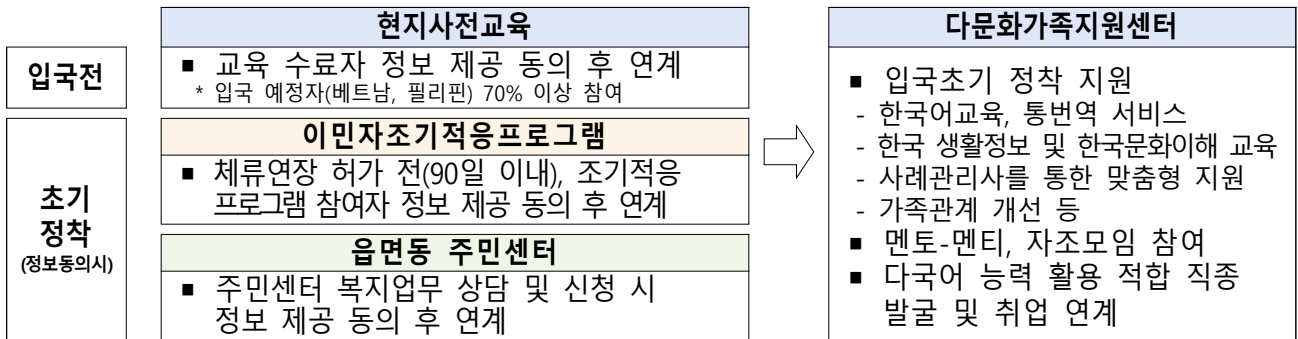
(3) 아동·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

- (제도 정비)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법·제도 정비
 -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* 및 디지털 성범죄** 대상 양형기준 설정('20.상, 대법원 양형위 협의)
 - *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처벌 법정형 상향, '성착취물'로의 법적 용어 변경 등 검토
 - ** 카메라등이용촬영죄, 통신매체이용음란죄,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
 -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*('20.상) 및 성범죄자 신상 정보공개·고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** 추진
 - *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 수신 → 본인인증 → 전자고지서 열람(단, 모바일 전자 고지 수신 미희망 및 미열람 세대주 대상으로는 우편고지 실시)
 - ** 실거주지 정보의 신속한 현행화 방안, 여성 1인 가구의 고지 대상에의 포함 여부, 공개·고지 정보의 개인 간 공유 허용 여부 등
- (협업 강화) 신종 아동·청소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 강화
 - 아동·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신고 기능 강화
 - 채팅앱 등에서의 아동·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유통사, 채팅앱 사업자 등 협업 강화
 - * (예) 채팅앱 등에 대한 성인등급으로 분류 강화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안내 문구, 신고방법 게시 등

(4)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

- (인권침해 예방) 올바른 사전정보 제공 및 인권 강화 교육 확대
 - 국제결혼 중개 광고 단속 강화 규정 마련('20.6월) 및 예비 결혼이주여성 대상 현지사전교육 확대('19년 베트남, 필리핀 → '20.6월 베트남, 필리핀, 태국)
 -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인권 교육 (多함께 프로그램) 실시(시범 10개 내외, '20.하)
- (초기적응 지원) 결혼이주여성의 정보 연계 및 안정적 적응 지원
 - 결혼이주여성 정보를 입국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*('20.3월)
 - * 현지사전교육, 조기적응프로그램,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 후 연계
 - 초기정착, 고충상담 등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확대('19년 140명 → '20년 174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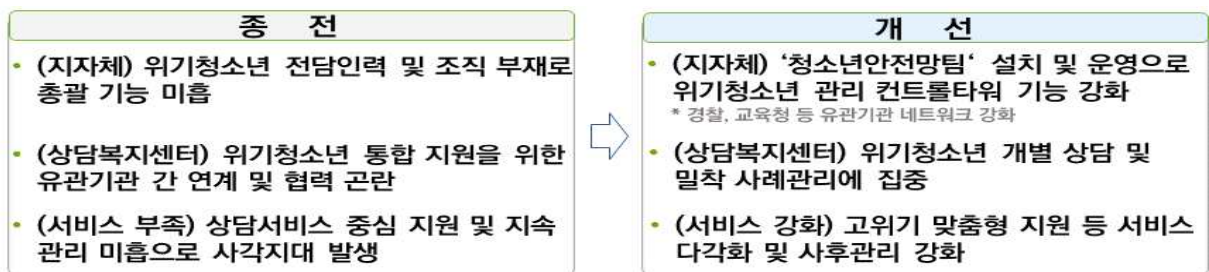
< 입국 초기 집중지원 서비스 체계 >



- (피해자 보호) 폭력피해 신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
 - 고위험 가정의 폭력 예방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와 학대예방경찰관(APO) 연계 강화('20.3월)
 -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전문상담 및 지원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확대('19년 5개소 → '20년 9개소)

(5) 위기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청소년안전망 구축

- (운영체계) 위기청소년 관리·지원 역할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수행 하도록 「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」 구축('20.1월~)



-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(청소년안전망팀, 9개소 신규) 설치 및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(청소년상담복지센터, 17개소 신규)
-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‘위기 청소년 통합정보망’ 신규 구축
 - *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, 청소년안전망 종합상담시스템(여성가족부),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보건복지부) 등 위기청소년 관련 시스템 통합·연계

○ (지원체계)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확대

- (학교 밖 청소년) 학습부터 진로, 건강까지 종합 지원* 강화
 - * ①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실시, ②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(20개소) 설치, ③공공분야 차별사례 발굴 및 대국민 인식개선 등
- (이주배경 청소년)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모델* 시범 운영(2개소, 신규)
 - * ①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(한국어교육 등) 운영, ②지역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운영, ③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민·관·학 협의체 구성·운영, ④급식 지원 등
- (아르바이트 청소년) 임금체불 및 부당 처우에 대한 대처 등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등 지원* 강화
 - *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야간 상담 신규 지원, 인공지능(AI)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 효율화,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확대('19년 청소년 → '20년 청소년+고용주) 등

(6) 일본군‘위안부’ 인권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

- (공공외교)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및 분쟁지역 여성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 및 공공외교 내실화
 - 여성인권 문제를 기록·기억하고 연대하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('20.하)
 - 북경행동강령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 계기 국제 회의 개최, 발전전략 수립 및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 추진
- (기념사업)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존엄회복, 여성인권·평화 가치 증진을 위한 관련 조사·연구 등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
 - 「일본군‘위안부’문제 연구소」를 통한 아카이브 서비스 실시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증언영상·번역 등 콘텐츠 개발·확산
 -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및 분쟁지역 여성인권 침해 관련 자료 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 등을 종합 수행하는 「여성인권평화재단」 설립 추진

3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

- ◆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돌봄공동체 확산
- ◆ 한부모·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□ 개요

- (추진배경)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가족가치관 변화로 **질 높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** 및 **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**
 - *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: 영유아 68.3% (215/315만명) vs 초등학생 12.5% (33/267만명)
 - * 초등 돌봄공백은 출산 이후 여성경제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짐
- (주요내용) 지역사회 **안심 돌봄 체계**를 구축하고, 한부모·다문화가족의 **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**을 조성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(1)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열린 돌봄체계 구축

- (돌봄공동체)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 마련
 -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 및 주민참여·소통 기반이 되는 가족센터 신규 건립 추진(64개소, '20.1월~)
 -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기반의 **사회관계망 지원** 등을 위한 정책 개발
 - **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관리 인력 추가 배치**로 야간·주말·방학 기간 등 운영 확대*('20.1월~)
 - * ('19년) 218개소 → ('20년) 268개소(시간제 인력 268명 추가 배치)
 -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**돌봄공동체 시범사업 실시**(15개 시·군·구, '20.2월~)

< 주민참여 돌봄공동체 모형(안) >

- (공동체) 부모, 주민자치회, 부녀회 등 지역사회 주민
- (돌봄대상) 만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
- (운영공간) 공동육아나눔터, 작은 도서관, 경로당, 마을회관, 체험학습장 등
- (지원내용) 학습·놀이·체험, 등하교 지원, 급식 지원 등

- (방과후 활동)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**인프라 확충 및 운영방식 개선*** 등 추진

* 방과후 활동 아카데미 확충 : ('19년) 280개소 → ('20년) 310개소
 우선지원대상 확대 : ('19년) 중위소득 150% 이하 → ('20년) 소득기준 삭제
 진로 체험형 특화프로그램 전국 확대 : ('19년) 9개소 → ('20년) 전국

(2)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

- (인증 확대)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

-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* 및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** 강화(중소벤처기업부 협업)

* 기업 인증 : ('19년) 3,833개사 → ('20년) 4,300개사

** 인센티브 :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금융지원 협약보증, 금리우대 등) 신청시, 우대

- 가족친화수준 진단을 위한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

- (문화 확산)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협업 활성화

- 가족친화제도와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청년홍보 서포터즈* 운영('20.6월)

* 가족친화인증기업 탐방(시설 견학, 간담회 등) 및 유튜브 등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

-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*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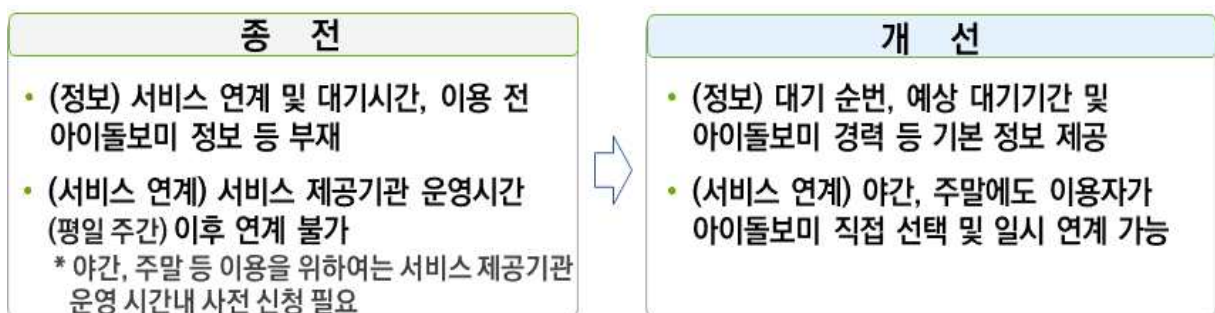
* 협의체(공동캠페인, 포럼 등 개최) : ('19년) 8개 → ('20년) 10개 기관 이상

(3) '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'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
- (이용 편의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신청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

- '아이돌봄서비스앱'을 통한 서비스 신청 및 신청자 대기현황, 아이돌보미 정보 확인 등 정보 접근성 제고('20.3월~)

- 야간·주말 등에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자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선택 및 연계할 수 있는 '일시 연계 서비스' 제공('20.3월~)



- (품질 관리)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
 - 부모에 의한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평가로 서비스 수준 제고('20.3월~)
 - 아동학대 방지,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례관리인력 신규 배치(총222명) 및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(현행 6개월 → '20.5월 1년)
 - 아동학대 예방교육·현장실습 확대 등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강화

(4) 한부모가족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

- (환경 개선) 자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관리 및 주거지원 확대
 - 시설입소 미혼모 임신·출산, 자녀 질병 등 건강관리 강화(신규)
 - * 의료급여 수급 이전 및 비급여항목 의료비 별도 지원('20.1월~)
 - 미혼모·부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*
 - * 주택/지역(누적) : ('19년) 158호, 13개 지역 → ('20년) 189호, 16개 지역
 -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·교육·상담 등 지원방안 모색
- (양육비 이행)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 및 책임성 제고
 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규 신청시 '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' 병행 신청 안내 강화 및 면접교섭서비스* 확대
 - * ('19년) 양육비이행관리원 → ('20년) 서울·경기권, 충청권, 전라권, 경상권 등 4개 추가
 - 비양육부·모의 자녀양육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(운전면허 정지 등) 도입 추진

(5)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 성장 지원

- (역량 강화)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 -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, 취업연계 등을 위한 '자립지원패키지' 확대 ('19년 183개 → '20년 196개)
 - 결혼이주여성의 자녀학습지도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등 사회참여를 위한 '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' 신규 운영('20.3월~)
- (자녀 성장)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 성장 지원
 - 이중언어 역량 강화* 및 정서적 안정, 사회성·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확대('19년 183개 → '20년 196개)
 - *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(이중언어 코치) : ('19년) 150명 → ('20년) 180명